



편집총국장제 사수 위한 법정 투쟁 재돌입 단협이행 가처분 소송 다시 제기...12일 첫 심리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편집총국장제·임면동의제 사수를 위한 법정 투쟁에 다시 돌입했다.

조합은 5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5월19~20일 진행된 대의원 투표에서 82.5%의 압도적인 지지로 단협이행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안건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첫 심리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조합은 애초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가처분 소송의 주체인 채권단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실제로 세자릿수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아졌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를 사측의 보복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전국언론노조 및 조합법인과 김성진 위원장, 이정진 사무처장 명의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측이 지난 3월 27일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임면동의 투표없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행위가 단체협약 위반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단협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측이 편집총국장 대신 콘텐츠융합상무를 편집인으로 한 것도 명백한 단협 위반으로 시정돼야 한다.

지난 2012년 파업 끝에 노사합의로

도입된 편집총국장제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통해 불공정·편파 보도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단협상 편집총국장은 임면 투표에서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앞서 조합은 박노황 사장이 취임 직후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며 단협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자 부득이 4월21일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단협이행 요구 가처분과 조복래 콘텐츠융합 상무와 이창섭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접수했지만 5월 초 이를 취하했다.

가처분 취하는 박 사장이 공병설 전 노조위원장 등 2012년 파업지도부 3명을 부당하게 지방으로 발령하려 하자 조합원을 보호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대응적 차원의 결단이었다.

당시 한 임원은 조합이 가처분을 취하할 경우 사측은 공병설 전 위원장 등 3명의 지방 발령을 보류하겠다고 확약했었다. 박 사장도 이를 보고 받았다. 사측은 조합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편집국장 직무대행 상황 해소 및 편집총국장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사측이 협상의 신의를 저버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측은 소를 취하한지 8일 만인 5월15일 공전 위원장과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지낸 이주영 부장대우를 지방 발령하는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

사측은 조합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편집국장 직무대행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5월18일 열린 첫 노사 실무협의회에서 사측은 조합의 즉각적인 임면동의 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한 채 편집국장 직무대행 상황을 그대로 두고 연말에나 단협 개정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실무협의회가 열렸지만 사측은 노조의 가처분 소송 제기만 문제삼을 뿐 편집국장 직무대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합이 편집국장 직무대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실무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사간 약속인 단협에 명시된 임면동의 투표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은 앞으로 있을 법원 심리 등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편집권 독립 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 주요일지

- ▲ 3/25 박노황 사장 취임
- ▲ 27 편집총국장 직제 폐지, 편집국장 직무대행 3월30일자로 발령
- ▲ 4/21 단체협약 이행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접수
- ▲ 27 제27대 집행부 출범
- ▲ 29 첫 노사협의회 개최
- ▲ 5/6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가처분 소송 취하 결정
- ▲ 7 가처분 소송 취하
- ▲ 15 편집위원회 재개
- ▲ 15 공병설 전 노조위원장 지방발령 등 인사
- ▲ 18 노사 1차 실무협의
- ▲ 19~20 대의원 온라인 투표...단협이행 가처분 소송 다시 제기 결정
- ▲ 22 노사 2차 실무협의
- ▲ 27 단협이행 가처분 소송 재접수
- ▲ 29 노사 3차 실무협의

박노황 사장 취임 이후 노동조건 크게 악화

출근 시간 당겨지고 휴일 근무도 늘어

수당 제대로 지급 안돼...사측에 시정 요구

박노황 사장 취임 이후 상당수 부서의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최근 대의원들을 통해 근무시간 변화 및 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출근 시간이 당겨지거나 부서원 감소로 휴일 근무가 늘어나는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해진 부서가 적지 않았다.

근무시간은 늘어난 반면 수당은 규정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부서들도 있었다.

박 사장 취임 이후 오전 8시 이후에 하던 편집회의가 7시30분으로 당겨지면서 일선 기자들의 출근 시간도 빨라진 경우가 많았다.

사회부 사건팀의 경우 출근시간이 6시30분에서 15분 당겨졌다. 사회부 행정팀은 과거 7시 전후에 출근했지만 지금은 늦어도 6시30분에는 나와야 한다. 7시까지는 조간 체크와 일정 보고 등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부 통일외교팀과 청와대팀도 출근시간이 7시에서 6시30분으로 조정됐고 정당팀도 당번을 정해 6시30분까지 나오고 있다.

영문뉴스부와 영문경제뉴스부의 경우 오전 6시40분까지 일정을 올려야 한다. 박 사장 취임 이후 보고 시간이 한 시간이나 앞당겨졌다. 그래픽뉴스팀도 출근시간이 한 시간 가량 당겨져 오전 6시~6시30분에



노설

박 사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우리 조합은 지난달 27일 박노황 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편집총국장제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조합은 제반 상황을 감안해 전과 달리 조복래 콘텐츠융합상무 등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부분은 제외하고 단협 위반 부분만 법원의 판단을 물었다. 그러나 사측은 바깥의 위기에 불구하고 안에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책임 운운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회사를 노사갈등의 위기로 내몬 당사자는 경영진이다. 앞서 조합은 전임 집행부 때 제기된 가처분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했었다. 박 사장은 그러나 문제의 인사 보류와 편집국장 직무대행 상황 해소에 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이에 우리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법적 카드를 다

시 꺼낼 수 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기수별 성명에서 작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경영진에 노사화합을 촉구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사측은 편집총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투표를 실시하기는 커녕 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을 통한 회사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심히 걱정된다. 플라톤의 '국가'를 원용하자면 회사를 결속시켜주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사원이 같은 성공과 실패를 기뻐하고 괴로워할 때다. 그런데 회사의 단합을 도모할 경영진의 행태는 어떠한가.

알다시피 박 사장은 취임 초부터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시키고 전채료 및 구독료 삭감이라는 위기론을 내세워 직원들을 옥죄고

있다. 회사의 경쟁력 향상은 직원들을 겁박하고 군기를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일할 맛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경영의 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박 사장의 인사권 전횡이다. 우리는 누차 얘기한대로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박 사장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헌정에서 대통령도 인사권을 제한받는 마당에 자신의 인사권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제왕적 발상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사전에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삶의 근거지를 옮기라는 폭력적 인사로 나타났다. 새 부서에 등지를 뜬지 한 두 달만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래서야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겠는가. 이전 같으면 인사

방이 한번 붙으면 쉽게 변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인사의 가볍기가 조변석개와 같다.

새 경영진은 '외부에서 보는 눈이 많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제대로 된 경영진이라면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통행식 행태로 상황을 꼬이게 만든 박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 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단협에 명시된 대로 편집총국장을 내정하고 임면동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인사의 난맥상도 바로 잡아 조직의 안정과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회사가 한마음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첫 걸음이다. ■

편집위 회의 고심끝 재개

공정정보도위원회는 지난 달부터 회사와 편집위원회 회의를 재개했다.

회사가 편집인을 제멋대로 바꾼 상황에서 회의를 다시 열기에 앞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사측은 편집총국장을 편집인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콘텐츠융합상무를 편집인으로 앉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편집위원회 회의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 재개는 사측의 부당한 조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당연히 제기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집위원회를 열지 않을 경우 공정정보도 여부를 감시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답이 아님은 명확했다.

편집위원회는 열지 않고 공정정보도위원회만 노조 자체적으로 개최한 뒤 회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는 방

식으로 공정정보도 기능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사측 반론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칫 사실관계 규명이 미흡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다가 사측의 반론에 뒤집힐 경우, 공정정보도 감시 활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결국 공정정보도 감시를 위해 아쉽더라도 편집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불공정보도 행위가 벌어질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훗날의 평가를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조합원이 주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

탁드린다.

자신의 기사는 물론 소속 부서 등에서 나가는 기사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보위원이나 조합에 제보해주시기 바란다. 제 3자의 제보도 무방하다. ■

※ 익명 제보 요령

노조 홈페이지의 '위원장에게 메일을' 코너를 이용하면 익명으로 조합에 메일을 보낼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메일 주소는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메일 주소는 a@b와 같이 '@' 문자만 들어가면 된다. '위원장에게 메일을' 코너는 홈페이지 우측 킷 메뉴나 해당 url(<http://newsunion.co.kr/ser/MailToB.aspx>)에서 이용 가능하다.

1면에 이어

는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

편집국내 다른 부서들도 당번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이른 6시 전후에는 출근해야 회의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임금협약에 따라 오전 6시30분 이전에 출근하면 하루 3만원의 조출 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사회부 행정팀과 정치부 통일외교팀 등은 7시 출근 기준인 하루 2만원의 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그나마 이런 부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증권부는 오전 7시30분 이전에 전 부서원이 출근하고 있지만 조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하루 2만원의 수당을 받아야 한

다. 박 사장 취임 이후 신설된 국제기획뉴스부도 오전 7시에 출근하고 있지만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영문뉴스부와 영문경제뉴스부도 당번으로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조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휴일에 갑자기 나온 보도자료를 처리하는 등 업무를 해도 대부분 부서에서 수당 신청은 언감생심이었다. 문화부의 경우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업무상 공연을 보는 경우가 잦지만 바로 기사화하지 않으면 수당은 없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로 각 부서의 대의원들은 주로 '관행상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자신이 제대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월급이나 상여금과 달리 수당은 전산상으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당 지급에 맞춰 그 내역을 대우서비스를 통해 공개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적어도 메일로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서원이 줄면서 기자 한 명당 챙겨야 할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도 많았다. 박 사장 취임 직전과 현재(6월2일)를 비교하면 상당수 부서의 인원이 감소했다. 정치부(27명→25명) 사회부(31명→29명) 경제부(14명→12명) 소비자경제부(10명→8명) 등은 2명씩 줄었고 산업부(14명→13명) 북한부(14명→13명) 등도 인원이 감소했다.

인원 감소로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났고 휴일 근무도 잦아졌으며 대체휴가나 반휴를 사용하기는 한층 어려워졌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임금협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

이에 회사는 근무시스템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조합은 이번 조사에 대해 불필요한 근무를 없애고 수당을 철저히 지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두고 편집회의에서 '노조가 위기의식이 없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회사 걱정엔 노사가 따로 없다. 업무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불문가지다. ■

인사 전횡에 멍드는 연합뉴스

“실험 가장한 보복 인사” 비난 쇄도…조합, 원상회복 요구

박노황 사장의 인사 전횡으로 회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전 노조위원장을 난 데 없이 지방으로 발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보복성이 짙은 인사를 감행해 조직 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 사장은 5월15일 사원 29명에 대한 인사를 공고했다. 인사 대상에는 2012년 공정보도 파업을 주도했던 공병설 전 노조위원장이 포함됐다. 국제뉴스부 소속인 공 전 위원장은 충북 제천 주재 근무로 발령이 났다.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지낸 이주영 부장대우도 IT 의료과학부에서 대전·충남취재본부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같은 인사는 사측이 파업 지도부에 대한 지방 발령을 보류한다는 약속 하에 조합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지 8일 만에 나왔다. 노조 전 간부들에 대한 지방 발령은 명백한 보복 인사다. 사원광장은 사측의 약속 파기와 독단적인 인사에 충격을 받은 사원들의 성토 글로 도배됐다.

보복 인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박 사장은 앞서 오정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다국어뉴스부 프랑스어뉴스팀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냈다. 임기를 끝낸 노조 위원장은 원래의 보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행이지만 위원장을 맡기 전 사실상 팀장 역할을 수행했던 오 전 위원장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임기 중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패소죄가 적용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박 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에서 근무 중이던 국장·부국장급 사원들도 대거 지역취재본부로 보냈다. 사측은 대상자들에게 사흘 만에 새 근무지에 부임할 것을 명령했지만 사전에 단 한 번도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중요한 인사를 앞두고 회사가 이번처럼 사전 고지는 물론 준비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지역본부 역시 지방을 ‘유배지’로 간주하는 이번 인사에 상처를 입었다. 사

장은 4월3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방 및 본사 취재 인력간 인사장벽을 철폐 하겠다면서 지방 취재인력 부족을 본사 사원으로 충원하고 지방 우수 근무자를 본사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우수한 지방 인력을 본사에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취재본부에 위화감만 안겨줬다. 사측은 임기가 끝나지 않은 특파원 2명에 대해서도 조기 귀국 조치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사측은 “회사가 비상 상황이어서 인사 실험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측은 “사장이 호소문을 통해 양해를 구한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졌다. 인사가 폭력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보다 지방에서 회사에 기여할 부분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칙없는 인사는 도리어 회사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IT의료과학부는 이주영 부장대우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국제학술지 기사가 누락됐고, 공병설 전 위원장이 빠진 국제뉴스부는 인원 부족으로 박 사장이 도입한 팀제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

결국 회사는 5월29일 이들이 빠진 자리를 메우는 전보 인사를 했다. 무엇이 그리 급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인사를 서둘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합은 이번 인사를 사상 초유의 ‘인사 폭거’로 규정하고, 원상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사측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조합은 5월22일 노사협의에서 “보복 인사에 희생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본사와 지방간 인사는 철저히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 징계의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합은 또 “회사는 본사 및 지방 발령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노조에 인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27대 노조 집행부 출범

연합뉴스 노동조합 제27대 집행부가 지난 4월 27일 출범했다.

김성진 신임 노조위원장은 이날 본사 17층 다목적 홀에서 열린 집행부 출범식에서 “새 집행부는 전임 노조와 마찬가지로 편집권 독립을 위한 바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 싸움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선부른 기대보다는 견고한 투쟁의지를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으로 공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합뉴스의 첫 번째 사시에도 ‘공정한 논평을 통해 정론의 초석이 된다’고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공정보도는 결코 노조만의 논리가 아니다”면서 “박노황 사장께서도 취임사에서 불편부당한 보도를 언급한 만큼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년 임기를 마친 오정훈 전 위원장은 “단체협약이 보장한 편집권독립 장치에 대한 도전과 조합원 복리후생에 대한 감축 시도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면서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은 노사 간의 이 같은 현안을 신임 집행부에게 남겨두고 임기를 접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박노황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김환균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



○ 제27대 집행부

- 위 원 장: 김성진
- 부위원장: 신선균 우영식(콘텐츠사업부, 경기북부취재본부)
- 사무처장: 이정진
- 총무부장: 이영재(정치부)
- 조직부장: 장재은(국제뉴스1부)
- 교육부장: 신재우(월간부)
- 복지부장: 이훈석(홍보기획부)
- 쟁의부장: 차대운(증권부)
- 조사부장: 이상현(북한부)
- 여성부장: 김정은(문화부)
- 지방부장: 김동철(전북취재본부)
- 홍보부장: 김동규(사회부)

◆ 노조 대출 연이율 2%로 인하

노동조합은 시중 금융기관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연 3.5%에서 2%로 낮췄다. 인하된 이율은 6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조합원들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등 5개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700만원 신청시에는 주택 매매·전세계약서나 가족 의료비 지출 서류 등을 제출해야 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경우 10개월, 500만원과 700만원은 15개월이다. 상환액은 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 398-3620에 문의.

◆ 집행부, 13개 지역취재본부 방문 돌입

노동조합 집행부는 지역취재본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5월27일 충북취재본부를 시작으로 13개 지역취재본부 방문에 돌입했다. 지역별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27일 충북 ▲28일 대전·충남 ▲6월1일 경기북부 ▲8일 광주·전남 ▲11일 경기 ▲16일 인천 ▲17일 울산 ▲18일 대구·경북 ▲22일 경남 ▲23일 부산 ▲25일 강원 ▲29일 제주 ▲7월7일 전북

새 집행부에 바란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곳에 있지도,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고유선 소비자경제부

연합뉴스에 들어와 보낸 시간이 만 7년을 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무엇을 바라는가 곰곰이 생각하다 다소 당혹스러운 웃음이 제 얼굴에 스쳐지나가 순간적으로 표정관리를 했습니다.

요즘 조합원들과 이야기할 때 쏟아져 나오는 여러가지 불만과 고민들은 7년 전의 그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습기자들이 들어오는데 왜 항상 사람은 모자라는지, 편집국 숙직과 주말·공휴근무는 왜 이리 자주 돌아오는지, 내가 쓰는 기사가 정말 국민의 알권리에 보탬이 되는 기사인지...

소속 부서나 연차를 막론하고 흔히들 입에 올리는 푸념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낮은 '고민과 고충의 데자뷰'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건강한 고민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고충이 해결되지 않을 때 조직의 구성원들은 불행해집니다.

요즘 '연합뉴스는 발전하는 역사가 아닌, 단순히 순환하는 역사를 가진 회사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한 후배의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찾기보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조원과 함께 호흡하는 집행부 되길



김진방 전북취재본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새 집행부가 들어 섰다는 것을 노조원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초기에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하는 노조원들이 더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노조원들을 믿고, 또 노조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노조원의 입과 눈과 귀가 돼 바로 말하고, 바로 보고, 바로 듣는다면 앞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이 어떨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처분 소송 대의원 투표와 채권단 서명에서 세자리수가 넘는 노조원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쳐 끼운 '첫 단추'를 시작으로 노조원과 함께 호흡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노조 가입 뿌듯...적극 동참하겠다



권오균 북한부

안녕하세요? 노조에 새로 가입한 북한부 모니터팀에서 근무하는 권오균입니다.

우선은 연합뉴스 노조의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직장 다닐 때는 노조가 없어서 사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사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답답함을 또 겪고 싶지 않아서 주저하지 않고 입사 1년이 되자마자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입한 지도 얼마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모르는 점이 워낙 많아서 바라는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혹시라도 노조에 바라는 점이 생기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합뉴스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배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시고요, 노조에 바라는 글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각오로 되어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연봉사원에게 관심을 가져야



서정호 미디어기술부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핵심 가치로 사수해야 할 것이 공정보도라면 조합원들의 복지 부분에서는 사내 차별 해소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임 노조 집행부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차별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임 집행부가 공개한 바와 같이 연봉사원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그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경영진도 호봉제-연봉제간의 임금차별 철폐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제 판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신임 집행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하에 지혜롭게 사내 차별 해소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희망합니다.■

노조의 동력은 신뢰와 소통으로부터

편집국 모 조합원

새 사장이 취임해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노조 새 집행부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뒤늦게나마 조합원의 충의를 모아 가처분 신청을 재개하는 등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회사 내·외부의 흑한과 맞물려 노조의 동력이 과거보다 수그러든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편집총국장제의 회복이나 보복성

인사 등 자명하게 부당한 일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집행부가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신뢰를 얻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 릴레이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나설

줄 알고, 뭉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집행부가 매년 한 발 빠른 판단으로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첫발을 뗀 만큼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